

‘후방 지뢰’ 수백억 쓰고도 제거는 하세월... “IMAS 도입해야”

나주 금성산위원회·녹색연합·(사)평화나눔회 공동기자회견

국방부 지뢰제거 성과 부진... ‘국제지뢰행동표준’ 도입 주장

민간 전문가 참여 위한 법 정비·지뢰전담기구 설립 제안

한반도 남쪽 후방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완전 제거를 주장해온 민간단체가 수십 년간 지체돼 온 국방부의 더딘 지뢰제거 작전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나주시 민간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와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등 3개 민간단체는 20일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안보에 국한된 국방부의 지뢰제거 관점과 방법의 한계성에 대해 지적하고, 속도감 있는 지뢰제거를 위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도입과 ‘범부처 차원의 지뢰제거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정기 무등산보호단 체협의회 상임의장,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과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녹색연합 소속 배제선 자연생태팀장, 이지수 활동가, 박규건 나주시 민간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 이만실 나주시시속가개발전협의회의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박규건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사)평화나눔회는 ‘전국 대인지뢰 매설현황’, ‘나주 금성산 지뢰제거 현황과 활용방안’, ‘지뢰제거 해의 모범사례와 국제기준(IMAS) 도입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 중요성’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목을 받았다.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은 나주시가 온전히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하세월하는 매설 지뢰 제거작전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성산 일대 지뢰는 지난 1960년대 공군 방공포 부대가 주둔하면서 북한

특작부대 침투에 대비해 기지방어 목적으로 총 1853개를 매설한 것이 전부로 전해진다.

지난 2003년부터 군이 작전을 통해 1779개를 제거하고 현재 74개가 산 정상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전략적 필요가 사라졌다고 선언했던 국방부가 지난 20년간 지뢰제거를 위해 수백억 원을 쏟아 붓고도 그동안 해제된 지뢰지대는 한 곳도 없다”며 “여전히 후방지역 37곳의 지뢰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결국 현재의 방법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뢰는 매설한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비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유실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될지 알 수 없다”며 “민간인에 의한 발견, 농작물 수확 피해, 산불 진화의 어려움 등 지뢰로 인한 사

회·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크다”고 유실 지뢰 위험성을 지적했다.

금성산 지뢰지대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국가안보적 관점에 치중된 지뢰제거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현장 지뢰 안내판은 떨어져 나뒹굴고 끝이 뾰족한 유행철조망은 곳곳이 끊어져 있어서 지뢰지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지뢰 표지판 앞에서 운동하며 지뢰지대 경계 철조망을 따라 등산을 하는 현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단체는 속도감 있는 지뢰제거와 안전한 지뢰지대 해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MAS는 범부처 협력과 국제협력, 민간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미 캄보디아, 라오스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검증된 지뢰제거 표준 모델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정부조직 내 총리실 직속으로 ‘지뢰제거 전담기구’와 ‘제거 공공기관’을 두고 전국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가 지뢰제거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정



전남 나주시 민간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와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 등 3개 민간단체는 20일 나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다목적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를 촉구했다.

안전부가 총괄하는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미 해외의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IMAS를 즉시 국내에 도입하고,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통해 후방지역 지뢰 문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민관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정기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뢰제거 관련 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나주시민공동위원회 산하 금성산위원회는 민간협력을 통해 후방지역 지뢰문제 해결을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하며 삭발하는 학생들’ 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중소상인들, 더 버틸힘 없다”...김부겸에 대책 촉구

“자영업자 실질적 임대료 지원 없어”

“3월 예정 거리두기 개편안도 미뤄져”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중소상인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김 후보자의 임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버틸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장식창 한국불링경영자협회 회장은 “북미유럽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 초기 봉쇄령 발동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했다”면서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피해 본 지역

업자들에게 실질적 임대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 회장은 “집합금지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은 사회가 공평하게 나눠 할 사회적 부담인데 그걸 왜 자영업자만 독박을 써야하나”며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온라인 간담회도 열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확진자가 늘어나니 올해 3월 적용하겠다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미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끝도 없는 집합금지, 제한을 연장할 것인가”라면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한국은행 예측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자영업자 70%가 신용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면서 “김 내정자 청문회에서 피해 받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예측이 현실화되면 경제적 위기를 넘어 정치적 위기,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며 “김 후보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김 후보자에게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